

##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내일 차관회의 분수령

문화부안 수용으로 가닥 ... 개정 안 되면 지자체 재정여건상 개최 불가능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2일 차관회의를 거쳐 7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시행령 내용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안이 대폭 수용되는 쪽으로 기운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제도 보강이 요구된다.

도에 따르면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2일 열리는 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뒤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이 시행령 공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했던 시행령안은 경기장 건설비용의 75% 이상,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7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가 요구한 개·폐회식장과 선수대기실, 공식후원사 홍보관, 올림픽메달프라자, 동계올림픽파크, 동계올림픽스포츠комплек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 도가 요구한 경기장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에 대해서도 시행사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안이 대부분 수용된 상태에서, 추후에라도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와 동계올림픽 개최 시·군의 재정여건상 대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 내년 예산 비상, 도 국회의원 끝까지 공조를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 발휘가 시급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등 새로운 현안사업비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1차 심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요청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2013년도 사업비 1,599억 원은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에서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2차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 평창군 대관령면에 들어설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사업비도 2차 심의 대상이 됐다. 환경부는 총 800억 원의 식수전용댐 사업비 중 설계비 1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심의에서도 이 현안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하면 지역 발전전략은 물론 동계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 간 정파를 초월한 협력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세의 약화로 인한 상대적 피해가 우려된다. 12월 대선이 있어 각 국회의원들은 개인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올 예산 확보전은 기본적으로 힘이 부치는 강원도

로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지금 강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자치단체 당국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 편성 절차 및 과정은 우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년 예산 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정제된 계획서를 다시 부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강원도 예산안은 제출되었다.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서 강원도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로 넘어간 정부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각 단계마다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예산은 따라온다.

## 동계오륜 특구지정 계획 수립 박차

### 강릉시, 이달 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 내년 1월 문광부에 최종 요청

2018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작업이 이달 중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내년 1월에 정부에 특구 지정 요청을 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31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릉시, 정선·평창군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특구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내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달 중순쯤에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안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열리며 10월에는 주민 공청회가 개최된다.

도와 관련 시·군은 내년 6월에는 특구 지정을 성사시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관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 내 국비지원, 특례 적용, 인·허가 의제처리, 조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돼 민·외자 유치를

촉진,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끌 것으로 강릉시는 전망하고 있다.

강릉시 동계올림픽지원단 관계자는 "동계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특화된 기능을 살리면서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 기능이 복합된 도시 모델을 창출, 도시 발전에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 아래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최동열 dychoi@kado.net

## 동계오륜 특별법 차관 심의 또 제외

### 26일 회의 이어 두번째... 도·기재부 이견 걸림돌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건이 2일 열리는 차관회의 심의 대상에서 또 빠졌다. 안건은 지난 2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빠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시행령과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간 조율이 안됐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1일 "2일

열리는 차관회의 안건은 31일 결정되는데 올림픽지원특별법 시행령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은 당초 27일 공포를 앞두고 있었지만 차관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논의가 계속 연기돼 시행령 공포 일정조차 미정인 상태이다. 특히 도와 기획재정부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개·폐회식장과 식수전용 저수지 등 대회 핵심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또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과 특구내 경관형성 정비 대상에 대해 각각 70%와 50% 이상의 국비지원과 올림픽 경기장 건설시 지역기업 우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는 검토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밝혀 시행령에 명시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박지은